

첨단의료복합단지·환경산업진흥 시범단지·탄소거래소

광주·전남 공동 유치 나섰다

민선 4기 후반기 '상생협력' 강화

광주시와 전남도가 첨단의료복합단지와 환경산업진흥 시범단지, 탄소거래소 등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국책사업에 대해 공동으로 유치활동을 펴기로 합의, 민선 4기 하반기 들어 광주·전남 공동 발전을 위한 상생 협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5면〉

박광태 광주시장은 지난달 30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민선 4기 2주년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광주시와 전남도가 개별적으로 유치를 추진해온 첨단의료복합단지와 환경산업단지, 탄소거래소 등 3가지 국책사업에 대해 광주·전남이 공동으로 유치 활동을 펴기로 박준영 전남지사와 최근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를 위해 태스크포스와 유치위원회를 공동 구성하고 유치에 성공할 경우 입지는 시·도가 협의

거쳐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광주·전남은 혁신도시를 공동으로 유치해 상생 협력의 전국적인 모델을 만들었다"며 "이들 사업도 광주와 전남이 각각 개별 경쟁에 나서면 유치가 쉽지 않으므로 힘을 합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오는 2017년까지 1조3천여억원을 들여 100만㎡ 규모의 의료집적화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첨단임상시험센터와 의료기기업체, 병원은 물론 주거·휴양·금융·교육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현재 이 단지의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광주와 전남, 대전, 대구, 인천 등 10여개에 달하며 이 가운데 대구와 경북, 대전과 충북은 권역별로 연합신청을 펼치고 있다.

환경부가 '환경산업 수출전략 산업화'를 위해 추진 중인 환경산업진흥시

범단지는 오는 2010년까지 3천500억여원을 들여 100만㎡의 권역별 환경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광주시는 산업연구원 용역 결과를 토대로 환경산업집적화단지와 예코시플레이션파크 조성 등을 추진해왔다.

탄소거래소는 기후온난화 방지 국제협약인 '교토의정서'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나 기업이 이산화탄소의 배출권을 사고 파는 시장이다. 정부는 오는 2011년 탄소 의무 감축을 위해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키로 했으며 국내 배출권 시장 규모는 연간 6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시·도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할 예정인 한국전력거래소와 연계해 탄소거래소 유치에 나설 방침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그동안 혁신도시 건설과 광역교통망 구축, 산업단지 조성, 2008 광주·전남 방문의 해사업 등을 공동으로 추진해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천주교 광주대교구 시국 미사

지난달 30일 밤 광주 남동성당에서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소속 신부 30여명과 신도 1천여명이 '이명박 정부의 회개와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시국미사'를 갖고 금남로까지 촛불행진을 벌였다.

/위경기기자 jrwi@kwangju.co.kr

미 쇠고기 85t 검역증 발급

검역원 9개월만에 ... 민노총 봉쇄 주내 유통 어려울 듯

작년 10월 이후 거의 9개월만에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검역증이 발급됐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작년 10월 5일 검역 중단에 앞서 도착한 뒤 지금까지 경기도 용인·인천·광주 등 경기도 검역 창고와 인천 영종도 계류장에 보관돼 있던 85.6t(6건)의 미국산 뼈없는 살코기에 대해 30일 오후 검역필증(검역합격증)을 발급했다고 밝혔다.

이날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합격증을 받은 업체들이 서둘러 관세와 창고 보관료를 완납할 경우, 이날 오후 늦게나 내일인 7월 1일이라도 검역 창고에서 물건을 찾아 유통에 나설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번주 초 미국산 쇠고기 유통이 곧바로 시작될지는 불투명하다. 여론 악화로 미국산 쇠고기의 관료 확보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수입업체들이 검역증을 받고도 당분간 물건을 찾지 않고 병동 창고에 그대로 둔 채 사태 추이를 살필 가능성이 있다.

현재 할인매장 등 대형유통업체들은 수입 반대측 여론을 살피며 미국산 쇠고기 취급 의사를 선뜻 밝히지 못하고 있다. 지난 26일 새 수입조건 고시 이후 검역을 받기 시작한 대기 물량도 일

정상으로는 이번주부터 유통될 수 있다. 검역원 중부지원은 고시 당일인 26일 오후부터 27일까지 대기 물량에 대한 X선 이물질 검사 등을 진행했고, 이날 검역관을 경기도 각 창고에 파견해 검역을 진행했다. 검역원 영남지원도 이날 부산 사하구 한 냉동창고에서 미국산 쇠고기 1천40상자, 약 17t에 대해 현물검사와 이물질검사 등을 실시했다. 검역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온라인을 통해 50건 이상의 검역 신청 민원이 접수됐고 서류 검토 등을 거쳐 이들 가운데 11건(170.3t)을 공식 신청으로 접수했다. /연합뉴스

지역발전교부세 '지역 길들이기'

보통 교부세 삭감 뒤 차등 지원

재정 압박·지역갈등 조장 우려

정부가 지방재정을 보전해주는 보통교부세를 삭감한 뒤 재원의 차등 배분을 골자로 한 '지역발전교부세'를 신설키로 해 광주시와 전남도 등 지자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1일 광주시·전남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보통교부세 22조7천234억원의 8%에 달하는 1조8천178억원을 삭감해 신설되는 '지역발전교부세'의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역발전교부세'를 기업 유치, 고용창출 등 정부정책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배분할 계획이다. 문제는 정부가 지자체에 당연히 지원해야 할 보통교부세를 '지역발전교

부세 제도'로 변경하면서 공모를 통해 재원을 지원키로 한 것이다. 즉, 사업 공모에서 탈락한 지자체의 경우 사실상 교부세 예산이 크게 삭감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광주시는 올해 지원받은 보통교부세 3천290억원의 10%에 달하는 300억원이 감소하게 된다. 전남도도 보통교부세 8천116억원 가운데 649억원이 줄게 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같은 정부의 방침에 대해 지방 재정자율권을 침해하는 등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도 지난달 25일 울산 중구청에서 제7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고 "보통교부세 재원을 삭감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은 지방교부세 재원의 기본적인 목적과 기능을 훼손하는 데다 재정자율권을 침해하는 요소다"며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안 철회를 촉구했다.

또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자체들이 지역발전교부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에 가세할 수밖에 없어 불필요한 지역 갈등을 부추길 가능성도 크다는 의견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역발전교부세는 결국 정부 입맛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를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며 "대안 없이 지역발전교부세를 추진할 경우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무안공항 명칭 바뀔까

박준영 지사 "광주 포함 무안 협의 가능"

박준영 전남지사가 무안국제공항 명칭에 '광주'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박 지사는 지난달 30일 가진 민선 4기 전반기 결산 기자회견에서 "무안국제공항 변경 문제는 필요하다면 광주시와 전남도가 논의하

고, 협의하는 절차를 거쳐 (국토해양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또 "무안국제공항 개항 당시 건교부도 시·도가 합의한다면 명칭 변경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광주상공회의소 등 민간에서부터 문제가

제기된 것 같은데, 명칭과 관련해서는 우선적으로 시·도의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지사는 그러나 "국제공항의 명칭은 대부분 해당 지역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이 관례"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남도는 광주시의 무안국제공항 명칭 변경 추진과 관련 "사전 협의나 검토 없이 즉흥적으로 나온 사안으로 보인다.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한 바 있다. 무안군 주민들도 개명 반대 서명 운동을 전개하는 등 강력 반발해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피부과학, 식물 유기자료를 주춧돌로
100% 천연 성분, 100% 천연 추출물

IOPE